

## 전북 인구, 한달 평균 400여명 감소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조사

10월 186만4043명으로  
지난 1월보다 4311명 ↓

무주·진안·장수  
전국 주민등록인구 적어

남원 덕과면, 출생신고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전북 인구가 월 평균 400여 명씩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저출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10월말 현재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86만4,043명으로 2015년 말에 비해 14만5,668명(0.30%) 줄었다.

전달에 비해서도 686명(0.02%) 감소했다.

남자는 92만7,284명이고, 여자는 93만 6,759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9,475명이 더 많다.

전북의 인구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주의 부정! 나라가 박근혜!”

지난 9일 밤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와 신도들이 전주 중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갖고 거리로 나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186만8,354명이던 전북은 지난달 현재 186만4,043명으로 이 기간 4,311명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전북의 인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에 랭크됐다.

지역 별 인구를 보면 경기(1,268만 3,730명)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995만 4,791명), 부산(350만3,789명), 경남(337만815명), 인천(294만1,793명), 경북(270만1957명), 대구(248만5,484명), 충남(209만1,626명), 전남(190만2,022명)

에 이은 전북의 순이다. 장수군과 무주군, 진안군이 각각 전국에서 주민등록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기록됐다.

전국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적은 10개 지역에서 장수군은 2만3,168명, 무주군 2만4,977명, 진안군 2만6,047명으로 각각 4위, 7위, 8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장수군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9년여 동안 1,447명의

출생신고가 접수돼 저출산 대역박이 시급했다. 장수군과 함께 한달 평균 출생신고가 20건 미만인 지역은 무주군과 순창군, 임실군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출생신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은 남원 덕과면으로 신생아 울음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다.

익산 성당면(6월)과 부안 위도면(10월)은 올해 각각 1차례의 출생신고가 접수됐다. /고민형 기자

## “쌀 산지가격 끌어올리기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목표가격과 비슷한 선까지 산지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수요량 대비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같은 ‘일반적 조치’가 아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생산과잉 시기마다 매입지원금을 풀어 농협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으로 버를 사들이도록 하는 것도 산지쌀값 하락을 부채질 하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2014년부터 2017년산 쌀까지 적용이 되는 목표가격은 80kg 정곡 기준 18만8,000원이다.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정한 것은 당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

또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농협이 과도하게 버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정환 쌀을 적정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RPC의 수익구조인데, 판매가능 물량보다 더 많은 버를 매입하고, 이에 따른 재고누적으로 저가남품을 하게 되면서 결국 쌀값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과 2015년 두 해 동안 수실역원대의 적자를 본 한 RPC의 경우 직접 도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2만톤가량에 불과했다.

하지만 매년 3만톤이 넘는 버를 매

80kg 기준 현재 12만9000원선으로  
목표가격 18만8000원선 보다 적어

“정곡 판매가능 물량은 계약재배 통해 매입  
나머지는 민간RPC 분산해 조곡 매입해야”

야 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생산자단체와 국회, 그리고 정부차원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목표가격은 산지쌀값과 변동직불금 및 고정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정곡에서 고정직불금 1만5,000원 가량을 빼면 산지쌀값이 80kg 기준 최소 17만원대는 넘어야 변동직불금을 받지 않고 목표가격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3년간 이어진 흉년으로 인해 현재 형성되고 있는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2만9,000원선이며, 직불금 없이는 목표가격을 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지 농민과 농협, RPC, 및 관련 전문가들은 “수요량 대비 과잉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으로는 목표가격 근처까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결국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만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입해 오면서 민간RPC 등에 사들인 가격보다 싼 값에 버를 되팔아 왔다. 또 버 재고가 많고 산지쌀값은 하락하면서 도정 후 판매한 정곡가격도 당달아 떨어졌다.

손실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수확기에 이어 올해 이어진 추가 시장격리에서도 적자를 봤다. RPC가 참여하면서 최저가 낙찰인 역경매 방식이 도입되면서 추가격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농협RPC 관계자는 “도정해서 정곡으로 팔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통해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RPC 등이 분산해서 조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풍작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확기 농협RPC로 버 매입물량이 물리면 결국 농협은 지난 2년 간처럼 내내에도 떨어내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산지 쌀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인재용 기자

“토·일요일신문 읽는다.”

## “국민 분노, 정부 무능력 등으로 발생”



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최순실 사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면서도 “현 정부는 국민이 좋은 삶든 합법적으로 뽑은 정부”라며 “중간에 끌

려 내려오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정부에서나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할 때도 있다”며 “한정 중단의 위기를 막고 거국내각 등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김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 등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역할이 아담이 할 필요성

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불안과 분노의 시대를 넘어 공존의 공화국으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를 특정인에게 일방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국민에게 가혹한 현실,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은 사회로 평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감자에 의한 약탈경제에서의 탈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통한 노동빈곤 해소와 공존 경제 확립, 산학연계협동 교육 도입,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 기득권 구조의 해체·특권 철폐, 숙련노동기반 가치창조형 중소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뉴스시스

민주당 김부겸 의원  
원광대 초청강연서

“약탈경제에서 탈피  
공존 경제 확립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수성갑) 의원은 “국민의 분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 소득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부겸 의원은 10일 원광대학교 부설 지역발전연구소가 주최한 초청강연에 참여해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증폭된 이면에는 이 같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모든 것은 수사하면 밝혀지겠지만 ‘이게 국가야’ 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이를 끌어내고 할 수 있는 것을 고

▶ 메일 INDEX

2면 “도·남원 연수관광지 보조금 부적정”

4면 허위 교통사고 20여 편취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 제16회 국무총리배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 도아리 경진대회

KOREA YOUTH CLUB COMPETITION

11월 12일 전북대학교

- ▶ 주최: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 ▶ 주관: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 JTV 전주방송
- ▶ 후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 참가대상: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및 청소년시설 청소년동아리
- ▶ 참가비: 무료

2009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라북도연맹,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JTV 전주방송, 전주매일신문